

버려지는 ‘그림자 신생아들’...신고누락 사각지대 여전

광주·전남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방치 잇따라 법무부, 작년 출생통보제 개정안 도입 입법 예고 출산 음지화 등 부작용 우려...“인식 개선 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신생아 유기·방치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과 행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법무부는 출생사실을 의무 등록하는 ‘출생통보제’를 입법 예고했으나, 해당 제도는 시설 밖 출산 아동을 보호할 수 없을뿐더러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미혼부모를 더욱 음지로 몰아넣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신생아 유기 범죄 사건은 해마다 5건 이하인 것으로 파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 당시 발견되지 않았거나 발견됐어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전부 합하면 영아 유

기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에서 영아유기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수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수의 한 다세대주택 원룸촌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거주지 주변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임신 사실을 주변에 숨겨온 A씨는 양육에 부담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해 여수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2년 동안 숨겨두고 생활한 4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비혼 상태

로 아이를 낳은 B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출생신고는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이처럼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고되지 않은 아동은 유기·방치 등의 학대에 노출 위험이 클 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진료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에도 제한을 겪게 되며, 학교 입학·전학 거부 또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출생통보제 도입(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산모의 출산을 담당 한 의료기관이 전모와 아이의 정보를 의무

적으로 국가에 통보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라고 알리고,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여성들이 병원 출산을 더 꺼리게 돼 시설 외 출산과

유기 범죄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신생아 유기·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병원 밖 출산 아동과 미혼모·미혼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사회 분위기를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생통보제는 아동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명 필요하나, 미혼 및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 변화, 사회적 인식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빈 기자



새해 소망문구 써주기 행사 10일 오전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열린 ‘새해 소망문구 써주기 행사’에서 시민들이 캘리그라피로 쓰인 새해 소망문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성훈 기자

대구 신문사들 ‘전두환 찬양 광고’ 게재

광주 시민단체 ‘재발 방지’ 촉구

광주 시민단체가 고 전두환씨를 찬양하는 광고를 게재한 대구 지역신문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매일신문과 경남일보에 대구 공교 총동문회와 동문장학회 등이 오늘 자 신문지면 하단 광고란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 영전에 바칩니다’라는 제목

의 광고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광고에는 전씨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웠다’라거나 5·18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왜곡된 일부의 증오와 분노’라고 표현하는 등 전씨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광고를

비판 없이 수용해 게재하는 게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한다”며 “해당 신문사는 국민들께 사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 당시 과격 진압을 한 공수부대원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만평을 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홍승현 기자

‘학교 시험문제’ 유료 판매 의혹 제기

시민모임,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예정

인터넷의 한 업체가 광주지역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수집해 유료로 판매해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A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A 업체는 학교의

연도별 시험문제를 수집해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건당 500원~1600원, 1년간 사용 가능한 정기권은 20여 만원에 형성돼 있다. 시민모임은 “A업체가 학교의 시험·답안지 등 시험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해주는 이용자에게 다운로드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족보(학교 기출문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

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를 목적으로 출처 자료를 악용하고 있어 실명,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피해를 입은 교사들을 모집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이 학교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승현 기자

내년 대입수시 1만명 이상 늘어난다

총 27만2,442명 선발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들어갈 2023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이 올해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난다. 10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 등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국 대학들이 수시 모집에서는 전년보다 1만64명 많은 27만2,442명(78%)을 뽑는다. 전체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포인트 높아진다. 광주·전남 주요 대학은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년보다 511명 많은 1만2,390명을 선발한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전남대는 3,680명, 조선대 3,728명, 광주대 1,734명, 호남대 1,635명, 동신대 1,613명이다. 학생부종합과 학생부종합 전형에서도 전형 방법을 바꾸는 대학도 많다. 전남대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가 통합해 학생부 종합이 분리된다. 광주캠퍼스는 학생부종합(고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 1)으로 1단계 서류평가 100%(4배수·의학계열 6배수), 2단계 1단계 70%+면접 30%를 진행한다. 여수캠퍼스는 서류평가 100%로 일괄평가한다.

조선대는 만학도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을 통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을 정 원내로 추가 배치해 학생부교과(사회통합전형)를 신설한다. 의예과와 치의예과 약학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광주대는 수시전형별 모집 비율을 일반 학생 61.3%에서 72.6%로 확대했으며 지역학생은 38.7%에서 27.4%로 축소했다. 호남대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만학도 전형을 신설했다. 기존 5배수로 선발하던 치위생학과와 물리치료학과를 7배수로 확대했다. 교과중심 학생부위주 전형에서 30%를 반영하던 출결성적을 20%로 축소했다. /이나라 기자

경매 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p> <p>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010-6670-9800</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